

동구 용산지구 개발 지지부진

400억원대 초기 사업비 마련 못해 2년 넘도록 보상 미뤄 주민들 반발

광주 동구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내놓았던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구는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 동구청과 용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2002년 유대명 동구청장이 당선된 후 동구는 공약사업으로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2005년 주민들에

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고 회까지 개최했다.

동구는 이후 2년이 넘도록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만 7차례 내면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에는 구비보 보상금을 총담한다고 공고했으나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자 민자유치, 사업자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토지의 30%를 선매수해 보상금의 1%를 우선 지급한 뒤 토지감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보상금은 토지 매각을 통해 보상해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주민들의 강한 반발만 불러오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동구는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보상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400억원에 달하는 초기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 등의 미비로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보상 작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보상금 지급만을 고집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산동 주민들은 이에 대해 “더 이상 구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고

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5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유지 개발에 앞서 토지 선매수가 필요함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불신을 키우고 있다.

주민들은 “구청측이 2년이 넘도록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책도 없이 약속만 남발하고 시간만 끌려한다”고 비난했다.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유입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산동 일원 19만2천㎡의 자연녹지지역에 총 410억원을 들여 2천13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한국광산업진흥회 '태양광 발전시스템' 준공 13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기태)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 준공식에서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연간 13만1천4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전력으로 광산업진흥회 전력 사용량의 76%를 공급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천 복개 대신 저류지 활용을” “도로 개설때 생태통로도 필요”

동구 용산지구 환경영향평가 심의서 지적

동구가 추진하는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측면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확정된 이후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여서 주목을 끌었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수들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심의위원(20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심의에서 최희철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택지개발시 우기가 닢

치면 빗물이 유입되는데 기존 하천을 복개하는 대신 (빗물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지를 하천과 연계하고 수변생태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전남대 교수는 “농경지로 이뤄진 사업지구 가운데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을 개발·포장하고 작은 용량의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했는데 영구 저류지 부분은 공원녹지나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

장은 “사업지구에서 남부경찰서 방한으로 건설 예정인 도로 개설때 터널형 생태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홍식 호남대 교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심의결과를 동구에 통보하고 심의내용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동안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 이하~15만㎡ 이상 택지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습도 10% 줄면
화재 25% 증가

공기 중 상대습도가 10% 감소할 때마다 화재는 25%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들어 지난 2월 말까지 습도에 따른 일일평균 화재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대습도가 90% 이상에서는 2건, 80~90%에서는 2.8건, 70~80% 3.1건, 60~70% 3.7건, 50~60% 4건, 40~50% 7.5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화재 발생은 습도가 10%씩 감소할 때마다 평균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자원봉사 하고 공공시설 공짜 이용하세요

市 교통카드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시행

광주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제도, 시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봉사자 교통카드 지급 등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시는 우선 연간 봉사활동 실적 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무료 이용 및 주차동물원 이용시 500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

록돼 최근 1년 이내 2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통장을 발행하고, 시·구센터와 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누적 500시간, 1천시간, 1천5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동장·은장·금장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1만시간 봉사자에게는 ‘봉사왕’ 칭호와 함께 인증패를 주는 ‘영예인증제’도 시행한다.

영예인증 부여자에게는 시 주관 행사 특별초청, 문화예술 공연 관람, 국내 선진봉사활동 견학, 국외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교통카드 지급 등의 혜택이 별도로 주어진다.

그동안 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1억원 상당의 사망·후유장애 등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도 제정한 바 있다. 안치환 자치행정과장은 “자원봉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Big Sale

Big Sale

봄 맞이 본사지원